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하거나 준수사항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법무부 소관)

홍 윤 식

●법률 제1441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인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20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한 민 구

국방부장관

●법률 제14416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바,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